

## 서문

냉전체제가 붕괴된 지 20여 년이 훌쩍 넘었지만 세계정치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양극화 체제에서 다극화로, 그리고 미국의 일방주의로 이리저리 흔들리던 세계질서는 다시 21세기에 들어와 9·11 테러를 맞으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여기에 경제위기와 헤게모니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그러지 않아도 불확실한 미래가 더욱 불안정한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적 상대주의라고 할 수 있다. 걸프전 이후 1990년대 초반부터 다시 불거지기 시작한 “문화적 변수”에 대한 관심과 “차이”의 재발견은 이런 변화의 출발점이었다. 20세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근대화와 합리주의 전통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고통과 갈등이 이러한 차이와 문화적 변수에 기인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문화적 차이는 “지역”이라는 공간적 대상을 기반으로 한다. 공간을 뛰어넘는 문화적 동화와 공감도 충분히 가능해졌지만, 아직도 우리는 지역의 범주 안에서 형성되는 정체성의 근원에 관심을 기울인다. “동아시아”라는 지역에 대한 관심도 이런 맥락에서 다시 부활하고 있으며, 덩달아 아랍, 아프리카, 유라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서구 문명의 주류에서 비껴나 있던 지역을 새롭게 조망하려는 움직임들이 다양한 학문 분과에서 일어났다. 동아시아는 1980년대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탐구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를 뛰어넘어 독자적인 문화권과 정체성의 근원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멀게는 1940년대의 대동아공영권과 19세기 이전의 중화질서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동아시아의 질서에 대한 성찰과 담론은 이런 점에서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금번 『세계정치』는 이와 같은 학계의 관심을 반영하여 “과연 동아시아 지역을 특징짓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큰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노력했다. 길게는 수 세기에 걸쳐, 짧게는 1980년대 이후 독자적으로 형성되고 존재해 왔다고 간주되는 동아시아는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다른 지역의 문화와 차별화되는 것인가? 또는, 동아시아는 과연 하나의 “지역” 또는 “공간”으로 불릴 수 있는 독자적인 공간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근거에서 동아시아의 독자성을 합리화할 수 있는가? 필자들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세부적인 영역에 걸쳐 경험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한 논거를 찾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무수하게 반복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경험적 데이터에 기반을 둔 동아시아 담론에 대한 성찰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특집호의 문제의식을 형성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필자들이 하여금 “동아시아의 특수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로 이어졌다. 냉전의 와해와 세계화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여러 지역은 빠른 속도로 통합되어왔다. 마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제국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온 세계가 “문명표준”으로 통합되었던 것

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유사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화의 추세와 더불어 “지역화(regionalization)”의 추세도 동시에 전개되면서 앞서 언급했던 지역과 문화권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었다. 따라서 이번 호의 필자들은 “동아시아는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로 글로벌 표준에 편입되었는가?”라는 세부적인 질문을 던지고, 분야별로 이러한 “보편성”의 모습이 동아시아에서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를 진단해보기로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동시에 동아시아의 “특수성”이 오늘날 얼마나 의미 있는 개념인가에 대한 성찰로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의 연구 작업은 그리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가장 먼저 “동아시아”라는 개념에 대한 합의가 필요했는데, 기존의 “동북아시아”라는 개념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하여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았다. 지리적인 경계선이나 문화적 차이 등 기존의 기준을 동원하는 것도 필요했지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국가들을 어느 선까지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의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일단 “동아시아(East Asia)”라는 표현이 오늘날 학계의 표준적인 용어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번 호의 공통적인 용어로 삼되, 필요에 따라 “동북아시아”라는 표현을 병기하기로 했다. 다만 후자의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 북한을 중심으로 하되 몽골, 대만, 홍콩을 포함하는 지리적 범위로 한정하기로 했다. 개념을 확장하여 일반적으로 “동아시아”라고 하는 경우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포괄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분명한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 어젠다로 남겨놓기로 했다.

또한 경험적 데이터를 어떤 영역에 걸쳐 수집하고 분석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안보, 무역, 에너지, 환경, 인권, 그리고 거버넌스의 6개 분야로 한정기로 하였다. 먼저 정성철은 경제의 상호의존도가 안보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동안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에서 자주 다루어오던 인과관계가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양태로 나타나는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가 간 안보갈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무역의 현저성(salience), 즉 상호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칭성(symmetry)이 낮다는 경제구조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두 가지의 경제변수가 모두 높을 경우 분쟁과 갈등의 정도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아시아 지역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결국 동아시아는 역내 경제교류가 대단히 밀도 있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국가 간의 대립구도가 매우 불안정한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경험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적어도 “안보”의 영역에서 동아시아는 글로벌 차원의 평균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교류와 관련하여 유웅조는 보다 구체적으로 무역량과 지역통합의 차원에서 동아시아의 특징을 잡아내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규모는 유럽보다 낮은 편이지만 북미 지역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무역 대상지역도 유럽에 이어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동아시아의 무역 의존도가 북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비해 괄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무역협정(RTA) 체결과 같이 의도적으로 역

내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에 있어서도 동아시아 지역은 상당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RTA의 체결 빈도나 양자 간 비중에서 동아시아는 유럽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는데, 다만 대상국의 분포에서는 역내 국가들보다도 다른 지역에 치중함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다변화된 교역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무역 패턴과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있어서 동아시아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특히 역내의 폐쇄적인 교역보다는 타 지역과의 교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결론을 가능케 하고 있다.

경제부문의 또 다른 세부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에서 김연규는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지정학적 위상과 “에너지 안보질서”의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최근의 북미 셰일혁명이 오일과 가스 시장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면서 세계 에너지 질서에 큰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경제발전예 주도적인 국가들이 몰려 있는 동아시아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셰일혁명은 이 지역이 “소비자 위주의 시장”으로 탈바꿈하면서 과거에 수동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도세력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석유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이 소위 “아시아 프리미엄”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지니고 있었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화는 동아시아가 글로벌 차원의 보편적 에너지 질서에 편승하면서 동시에 동아시아만의 특수한 지위를 잘 활용함으로써 그 지정학적·전략적 위상에 큰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 환경 분야에서 임시정은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환경규범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특징을 파악코자 노력하고 있다. 이 분석에 의하면, 환경규범이 수렴되는 글로벌 추세에서 동아시아도 예외가 아니며 따라서 동아시아만의 독특한 특성이 관찰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보다도 역외 국가들과 더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적·문화적 특성보다도 경제발전의 수준이라는 보편적 변수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책 포트폴리오와 정책 도입 순서 등 세부적인 기준에 의해 동아시아의 환경규범 수용성을 분석함으로써 임시정은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환경 부문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있다.

인권 분야는 오랫동안 동아시아 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관심을 덜 받아왔는데, 송영훈은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분석을 전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은 오랫동안 “아시아적 가치”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 글로벌 차원의 보편주의에 저항하는 근거로 삼아왔는데, 특히 인권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글로벌 차원에서 합의되어 있는 8가지의 인권 관련 규범, 즉 인종, 여성, 장애인, 어린이, 이주노동자 등 소수집단 또는 차별받는 집단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범을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그는 인권에 대한 동아시아 지역의 인식과 태도가 글로벌 차원의 표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규범적인 차원을 넘어 실제 정책 차원에서는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FHI를 근거로 한 “정치적 권리” 및 “시민의 자유” 항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일본·몽골 등 높은 점수를 보이는 국가

군과 중국·북한 등 낮은 수준의 국가군 사이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국제난민의 보호에 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상도 크게 높은 편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난민문제가 “정치화”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인권 분야에서도 동아시아는 지역 차원의 독특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동준은 역내 문제해결 장치, 즉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진단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초국경 쟁점을 처리하는 메커니즘에는 크게 외교, 패권, 그리고 거버넌스가 있는데, 어떤 유형이 지배적인가는 역내 힘의 분포가 큰 영향을 미친다. 동아시아의 권력 분포는 미주 지역만큼 크지는 않지만 유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한 상황이다. 조동준은 중국의 성장이 곧 지역 패권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동아시아에서는 외교를 통한 문제해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추세도 증가세에 있지만 다자간 지역 기구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동남아시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체로서 작동하고 있는 ASEAN 등 몇몇 기구에 국한되고 있으며, 역내 통합을 강화하는 정도의 장치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결국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제해결 메커니즘이 대부분 양자외교에 치중해 있다는 점, 그리고 역내 협력체보다는 글로벌 차원의 보편적 국제기구에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의 거버넌스 구조는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조동준의 판단이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볼 때, 오늘날 동아시아만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유된 경험”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부분적으로 역내의 교류 증진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네트워크에 더 많은 성과를 거두어왔다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경제, 환경, 인권, 거버넌스 등 세계정치의 핵심적인 사안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택하고 있는 정책이나 입장을 통해 알 수 있다.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등 이 지역의 주요 국가들 사이에 지난 100여 년에 걸쳐 누적되어온 역사적 원한 관계와 경쟁 심리, 정체성의 대립과 이데올로기의 차이 등 다양한 정치적 요인도 동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묶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의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나의 지역”으로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동아시아의 지금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지역화와 지역주의를 위한 “동아시아”의 개념은 아마도 낡은 프레임워크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 196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동아시아 지역주의 담론도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추동력을 갖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특집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안보, 무역, 에너지, 환경, 인권,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아시아는 더 이상 상대주의적 관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독특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적어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글로벌 활동과 그들 사이의 교류를 보여주는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이러한 점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이 여전히 정치적



교류와 문화적 정체성을 위한 중요한 프레임워크로 작동할 것이라는 데 큰 이견을 달기 어렵다. 우리가 살펴본 데이터는 여전히 물질적·가시적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초국가적 가치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인식의 공유 정도를 보여주는 데 있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는 아마도 조만간 이루어져야 할 후속 연구 작업의 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오랜 시간 뒤늦은 원고를 참고 기다려준 사회평론아카데미의 편집진과 원고 취합 및 교정을 도와준 국제문제연구소의 김상은 간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편집진을 대표하여

민병원